



목 차

1쪽. 권두언

2쪽. 하반기 주요활동

3쪽. <특별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미국 데니스 패터슨 교수

5쪽. <특별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중국 동계용 원장

7쪽. <인터뷰>
한국연구재단 이걸우 사무총장과의 대담

9쪽. <학술 심포지움> 제도와 국가발전

12쪽. [논단] 제도와 국가발전

41쪽. 세계사회과학 포럼(WSSF) 참가

42쪽. 회원학회 동정

43쪽. [발간소식 알림] 융합연구: 이론과 실제

(사단법인)한국사회과학협의회

주소 (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304-28
Tel 02-735-2159 Fax 02-737-3264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304-28 Sajikdong, Jongnogu, Seoul 110-054, Korea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권두언: 쉘페터, 케인즈, 그리고?



이종원(한국사회과학협의회 이사, 성균관대 명예교수)

아이러니컬하게도 사회주의를 주창한 Karl Heinrich Marx가 타계한 1883년에 20세기의 대표적 자본주의 경제학자 두 명이 탄생하였다. J. M. Keynes와 J. A. Schumpeter이다.

케인즈는 세계경제를 주도해왔던 영국경제가 쇠락의 길에 서게 된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그 처방을 제시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마다하지 않았던 적극적 그리고 실천적 경제학자였다.

반면 쉘페터는 현실과는 일정 거리를 두었던 말하자면 서재에 머무는 유형의 경제학자였다. 그는 자본주의의 본질은 무엇이며 자본주의를 자본주의에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본주의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가에 주로 관심을 가졌고 따라서 특정국가의 이익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학문세계에 오만하리만큼 강한 자부심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자행할 만큼 엘리트의식이 강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성품의 소유자들이었다.

세상의 주목을 먼저 받은 것은 약관 스물다섯살(1908)에 『이론경제학의 본질과 주요내용』이라는 저서를 출판하고 그로부터 4년 후(1912) 『경제발전의 이론』이라는 책을 펴낸 쉘페터였다. 그러나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종결을 의미하는 베르사유조약에 대한 비판서인 『평화의 경제적 귀결』(1919) 발간 후 이어서 1930년에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출판한 케인즈가 급부상하면서 쉘페터의 업적은 빛이 바래고 말았다. 쉘페터는 심지어 케인즈의 『화폐론』 출판으로 1920년대 내내 써왔던 『화폐론』의 원고를 파기할 수밖에 없어 케인즈에 대해 매우 강한 적개심까지 품게 되었다. 실감함과 적의감에 빠져 “정치꾼이라는 어찌할 도리 없는 야수들”이라고까지 케인즈 경제학을 비판하였지만 케인즈는 쉘페터에 관심조차 표명하지 않았다. 더구나 쉘페터가 자신의 대표작이라 보았던 『경기순환론』(1939)마저 앞서 출간된 케인즈의 『일반이론』(1930)으로 빛을 바래 버

리자 결국 Harvard대학에서 영재교육에 전념하는데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케인즈 경제학은 승수이론과 유동성선호설이라는 두 개의 기둥위에 세워진 것으로 1929년의 세계대공황을 타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현대경제학은 정부가 제3의 경제주체로 등장하는 수정자본주의로 변화하였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정부의 능동적 시장개입이 당연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케인즈 이론은 적어도 1960년대까지는 선진국 경제성장은 물론 후진국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산업부문간 불균형, 독과점의 병폐, 그리고 관리통화제도에 따른 상시적 인플레이션 발생 등의 문제를 예견하지 못했고 1973년 제1차 원유가 파동이후 결국 주도적 경제논리로서의 위상에 금이 가고 말았다. 또한 케인즈 경제학은 그 기본논리가 수요측면만을 중심으로 정립되었다는데 원천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역사 속에 오랫동안 잊혀졌던 쉘페터의 경제이론이 재조명 받게 되었다.

쉘페터 이론은 그 논리가 공급측면을 중심으로 정립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창의적인 기술혁신 노력이며 이것이 경제를 질적으로 그리고 동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물론 그의 논리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 외에도 설혹 정책효과가 있다 해도 상당기간 후에야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속성 때문에 단기적 성과를 절대적으로 바랄 수밖에 없는 정치가와 정책결정자들의 지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결국 케인즈경제학을 대체할 논리정립은 지연되어 왔고 결국 신고전파적 정책에 편승하여 실물과 괴리된 금융이 과도하게 확장되던 중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초래되고 말았다.

쉘페터 이론에 이어 케인즈 이론의 대안으로 활용되던 신고전학파 경제논리마저 국제금융위기를 초래하며 그 한계를 드러내자 각국은 제쳐 두었던 케인즈적 처방을 다시 끄집어내어 위기대처에 나섰고 단기적이거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미 한계를 드러낸 케인즈 경제학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리고 쉘페터류의 공급경제이론도 대안으로서의 입지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급증, 소득불평등악화, 부동산시장 및 경기의 장기적 침체, 그리고 투자 위축 등에 따른 잠재 성장력 저하 등을 생각해보면 이제 더 이상 케인즈와 쉘페터의 논리만으로는 해답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20세기를 대표했던 두 자본주의 경제학자에 이어 새 시대를 선도해갈 경제논리의 새로운 탄생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하반기 주요활동



2013년도 정기 총회

10월

국제사회과학협의회(ISSC) 주최:

제2회 세계사회과학포럼(WSSF) 참가

주제: 사회변동과 디지털 시대

(Social Transformations and the Digital Age)

일시: 10월 13일 - 15일

장소: 캐나다 몬트리얼 Palais des congrès

공동기획: UNESCO 한국위원회, 한국연구재단

참석: 박찬욱 (서울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엄석진 (서울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편집위원장)

7월

<특별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주제: 미국의 사회과학발전과 정부의 역할

일시: 7월 15일

발표: Dennis Patterson (텍사스텍 정치학)

9월

<특별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주제: 중국의 사회과학발전과 정부의 역할

일시: 9월 3일

발표: 동계용 (중국 인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운영협의위원회

일시: 9월 13일

장소: 코리아나 호텔 대상해

학술심포지엄

주제: 제도와 국가발전 (I)

일시: 9월 13일

장소: 코리아나 호텔 세미나실

11월

이사회

일시: 11월 29일

장소: 명동 마노 디 셰프

학술심포지엄

주제: 제도와 국가발전 (II)

일시: 11월 29일

장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홀

정기총회

일시: 11월 29일

장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홀

12월

KSSJ 40권 2호 발간

저서출판

제목: 융합연구: 이론과 실제

출판사: 법문사

특별 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미국의 사회과학 발전과 정부의 역할

- 일시: 7월 15일
- 장소: 달개비
- Dennis Patterson 교수
- (미국 텍사스텍대 정치학과장)

Dennis Patterson 교수는 미국 텍사스텍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며, 학과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 정치 전문가로서 특히 일본정치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 세미나에서 미국의 사회과학 발전의 과제와 정부 역할에 대한 패터슨 교수의 발제에 이어 한국 사회과학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토론했다.

오늘날의 사회과학과 데이터 공유

미국의 시각에서 바라 볼 때 한국은 이웃국가인 일본이나 대만에 비하여 학문적으로 매우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저명한 학자들이 많고, 사회과학협의회의 *KSSJ*를 포함한 한국에서 발행하는 많은 저널들이 양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고, 질적으로도 논문의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회과학의 최신 트렌드는 데이터 공유입니다. 데이터의 추가와 수정을 통하여 기존 데이터를 발전시켜나간다면 더 많은 학자들이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는 사회과학 발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정치학보의 에디터는 출간된 논문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가상디지털 자료실이나 미시건 주립대의 ICRR 데이터 저장소가 데이터의 저장과 공유에 앞장서고 있으며 라이스 대학, 펜실베이니아 스테이트의 Gary King 교수 및 많은 학교와 학자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공유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용한 정책에 기반이 되는 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해결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역사학을 예로 들어 보자면 종전의 역사학은 정치, 문화적인 부분을 주로 연구했지만 요즘에는 과학적인 부분의 연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와 문화는 농업에 의존하였고, 농업은 과학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역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연구 역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렇듯 기존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국경을 초월한 대륙간의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공유를 통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를 모아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기상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텍사스텍 대학의 모든 학과장들에게 기후변화센터를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후 변화 역시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기후 변화를 종교적으로 설명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도시 관리자라고 가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80%가 기후의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바뀐다면 기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얼마 전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 여름의 기후가 점점 나빠져서 걱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년 기온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태풍의 영향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전 세계 곳곳에서 태풍, 가뭄, 쓰나미로 인해 수만 명이 죽고 다치는 것을 목격합니

다. 기후 변화는 분명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상, 해양, 인구이동 등 다른 인접 영역을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기온의 상승 뿐 아니라 기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다학제적 협력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미국 사회과학이 마주한 문제점

미국의 정치인들과 언론은 사회과학에 대해, 특히 정치학에 대해 무지합니다. 미국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사회과학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의 악화로 인하여 미국 사회과학이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편당입니다. 대통령과 의회는 정치학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없애버렸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 역시 정치학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정치학과 정치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학 역시 정치적인 색을 띄고 서로 싸운다고 말이죠.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정치학과 정치의 차이점을 잘 설명 할 필요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공적개발원조 (ODA)를 사례를 살펴보자면 한국은 무역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지원하지만 미국은 ODA를 정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미국은 쿠바에 경제적 제재를 통해 민주화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쿠바와 무역을 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민주화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톨퍼-사뮤엘슨 정리 (Stopler-Samuelson theory)에 따르면 각국은 무역을 통해서 자신에게 풍부한 자원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이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가 무역을 한다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은 무역을 통하여 이익을 보게 되므로 영향력이 커지겠지요. 노동자 집단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면 민주화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이러한 사회과학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사회과학이 과학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어준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정책을 만들 것 입니다.

특별 세미나: 세계의 사회과학

중국 사회과학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

- 일시: 9월 3일
- 장소: 달개비
- 동계용 원장
- (중국 인민대 행정대학원)

1978년 중국개혁개방 이후 3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국사회과학에 다시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인민대학교의 동계용 학장과 함께 중국사회과학이 직면한 과제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동계용 학장은 인민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한 이후 행정대학원 교수와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세미나에서 중국 사회과학 발전의 과제와 정부 역할에 대한 동계용 교수의 발제에 이어 한국 사회과학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토론했다.

중국의 사회과학 개관

첫째, 중국은 독자적인 중국형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다. 2008년 이전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의 사상과 시스템을 배워 중국에 적용하였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서양의 시스템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서양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며 중국의 사회과학자들은 무조건적인 수용보다 중국에 적합한, 중국형 모델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 사회과학자들은 모든 나라에 적합한 한 가지 모델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세상 모든 나라에 적합한 모델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커졌고, 그로 인하여 중국에 맞는 중국만의 모델 개발을 시작하였다.

둘째, 사회과학연구 방법론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의 중국사회과학은 질적 연구 위주였고, 양적연구는 거의 거부되다시피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양적연구가 증가하며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함께하게 되었다. 이전에 양적연구가 적었던 이유는 데이터의 부족이었다. 경제성장, 인구변화 등을 연구하려면 다년간의 수치가 필요한데 이전에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양적연구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영향을 받은 많은 학자들이 설문지를 개발하고 자료를 모아 양적연구의 기초를 쌓았다.

셋째,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논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이론적, 규범적 논의에 머물러 있던 사회과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 논의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미래의 중국사회과학자의 임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첫째, 지금까지의 중국사회과학은 경제발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경제학 제국이라 불릴 정도로 경제학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학, 사회학, 법학, 관리학 등 다른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 둘째, 교육, 의료, 복지 등 비경제적 성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개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다양한 학문에서 여러 시각으로 정부개혁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공공영역개혁 및 정부개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

어려야 한다. 중국은 영토가 워낙 넓고, 31개의 지방정부 (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의 크기, 기능, 발달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과세에 대한 문제와 지방정부부채에 대한 문제는 연구가 시급하다.

넷째, 사회조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국 사회는 정부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왔으나, 중국에서도 작은 정부 큰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NGO, NPO, 정부기업체, PPP 등의 주도로 어떻게 사회건설 및 사회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 세 가지는 중국사회과학에 핵심적 연구 문제이다.

- 1) 도시화: 현재 중국은 인구의 52%가 도시에 거주하며 48%는 아직 농촌에 거주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도시화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세계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에는 중국인구의 70% 정도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10억 명 증가한다는 것인데 농민들이 어떻게 편안히 도시생활로 전환 할 수 있는지가 큰 문제이다.
- 2) 소득격차: 중국은 소득의 격차가 매우 크고 선명하다. 그로 인해 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3) 고령화: 중국의 한 자녀 갖기 정책으로 인하여 근로자층은 점점 줄어들지만 의료발달로 인해 인구는 고령화된다.

인터뷰: 한국연구재단 이걸우 사무총장과 강성남 사무총장의 대담



12월 18일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한국연구재단 이걸우 사무총장과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강성남 사무총장이 대담을 가졌다. 한국연구재단의 신년도 지원계획, 그리고 지원 확대를 위해 사회과학자들에게 바라는 점들을 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강성남: 한국 연구재단이 사회과학 연구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성과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우: 우선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SK사업은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적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 국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집단 육성을 통해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시, 국내외의 사회과학분야 연구동향정보를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진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010년도에 150억원에서 2013년도에 285억원으로 꾸준히 증액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지원이 2012년 2,057억원에서 2013년 2,082억원으로 증대하였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사회과학분야 우수성과 발굴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성남: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수요에 비해 적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걸우: 사회과학 분야에 분배되는 예산규모는 학문적 특성상 실험실습 또는 장비구입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연구성과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회적인 필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인문학대회(The World Humanities Forum)가 있습니다. 세계인문학대회 수준의 사회과학 컨퍼런스가 있다면 교육부와 상의하여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강성남: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패널을 구성하여 세계사회과학포럼(World Social Science Forum)에 참석 하였습니다. 주최 측인 세계사회과학위원회(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가 2018년에 개최될 예정인 제4회 세계사회과학포럼을 한국에서 유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이결우: 한국의 사회과학 진흥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또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사회과학포럼이 세계 사회과학자와의 교류의 장이 되어 한국 사회과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자면 다가오는 2014년부터는 제1회 세계사회과학포럼 등의 사회과학분야의 다양한 연구성과와 역량이 집결된 포럼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착실히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큰 대회는 단 시간에 준비하여 개최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전국 사회과학분야 학회 그리고 전국 국공립 사회과학장 협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2018년의 세계사회과학자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사회과학포럼 한국 개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성남: 인문학진흥법안이 국회에 상정 중입니다. 사회과학 분야도 추가하여, 인문사회과학을 함께 진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결우: 학문의 발전을 위한 지원은 가능한 한 확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에 대한 지원확대 또한 함께 검토해 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과학자들이 역량을 한데 모아 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는 이슈를 생성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회의 위계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문분과 내에서도 주요 학회가 권한을 확보하여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질서를 마련하여 사회과학 분야에서 결집된 역량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추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강성남: 학술진흥정책의 마련 및 집행에 특화된 한국연구재단의 핵심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결우: 학술진흥정책이라는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술진흥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한국연구재단과 사회과학자 간의 소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의 진흥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준비 할 때, 사회과학자들이 함께 고민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산증액 차원을 넘어 서는 체계적인 정책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강성남: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결우: SSK사업의 예산 증대를 위해서 연구재단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에 29억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지원사업의 추진방향으로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연구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상대적으로 연구여건이 열악한 연구자 지원을 통해 연구저변 확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전략적 투자 강화, 학술연구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학술연구 성과의 대중 확산 강화 및 연구자 교류 확대라는 틀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술심포지엄

2013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학술심포지엄 제도와 국가발전

한 나라의 부흥과 쇠퇴는 그 나라의 다양한 제도(institution)들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남·북한을 비롯하여 성패가 엇갈린 여러 나라들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아세모글루와 로빈슨(Acemoglu & Robinson)의 결론이기도하다. 한국이 지난 65년 동안에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하는 국가와 사회 부문의 제도들을 점검하고 개혁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배태된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여 정합성을 높이면서도 시대적인 환경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과학협의회에서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부문의 다양한 제도들과 국가발전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심포지움은 그동안 한국의 출중한 사회과학자들이 수행해 온 ‘사회과학한국(SSK) 사업’ 연구의 성과를 발표하고, 각 논문들에 대해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의 시각에서 제도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도와 국가 발전 (I) : 국가 부문



일시: 2013. 9. 13 (금) 오후 2:00-6:00

장소: 코리아나 호텔 세미나실

후원: 한국연구재단

2:00-2:30PM 개회식 (사회: 이지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편집위원장)

개회사: 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축사: 김세영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장

2:30-6:30PM 논문 발표 및 토론

사회: 백완기(한국사회과학협의회 이사, 고려대 명예교수)

표준화, 사회통합, 그리고 국제경쟁력

발표: 이희진(연세대 국제학)

토론: 이명석(성균관대 행정학), 이재열(서울대 사회학)

기후변화 관련 제도의 국제비교

발표: 박덕영·이순자(연세대 법학)

토론: 배병룡(경상대 행정학), 정서용(고려대 국제학)

위계적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기반

발표: 윤성이(경희대 정치외교학)

토론: 김재한(한림대 정치학), 이창길(세종대 행정학)

제도 선택과 정치적 역동성

발표: 고상두(연세대 지역학)

토론: 김종성(충남대 행정학), 이영철(전남대 정치학)

국제 인권 레짐의 확산과 영향

발표: 서창록(고려대 국제관계학)

토론: 김영수(서강대 사회학), 이병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한국적 입헌주의의 제도화

발표: 송석윤(서울대 법학)

토론: 윤건수(고려대 행정학), 장용석(연세대, 사회학)

제도와 국가발전 (II): 시장 및 시민사회 부문

일시: 2013. 11. 29 (금) 오후 1:30-5:00

장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홀, 11층)

후원: 한국연구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30-1:50PM 개회식 (사회: 유영철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연구위원장)

개회사: 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축사: 김세영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장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50-5:00PM 논문 발표 및 토론

사회: 차재호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이사 (서울대 명예교수)

기술의 사회화와 성장

발표: 김길선 교수(서강대)

토론: 이재열 교수(서울대), 홍성만 교수(안양대)

‘한국형 모델’의 진단과 대안

발표: 유정식 교수(연세대)

토론: 김재한 교수(한림대), 이영철 교수(전남대)

한국 노년의 사회적 이해: 연령주의 전개와 양상

발표: 김주현 교수(서울대)

토론: 안형기 교수(건국대), 하호수 교수(한림성심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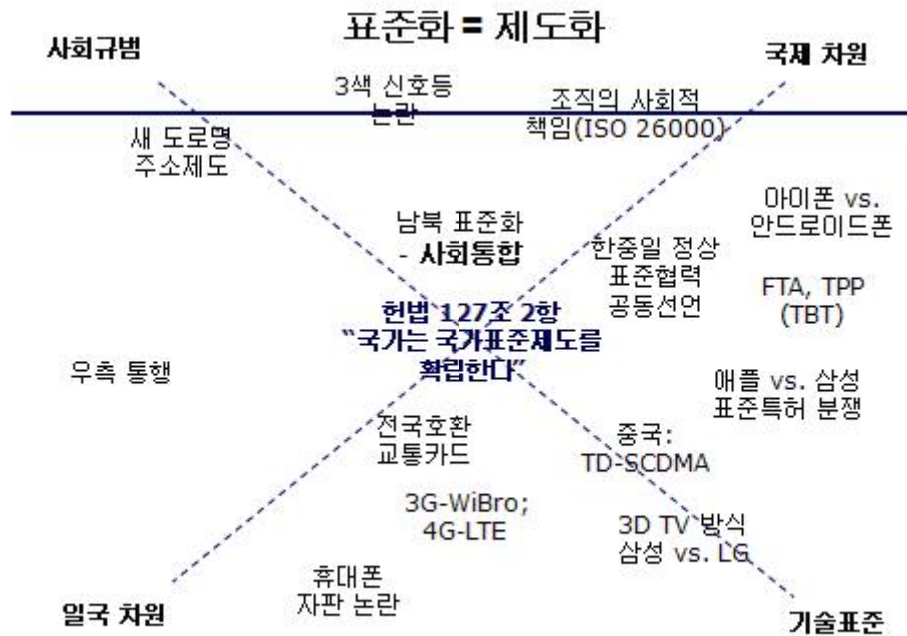
발표: 이종영 교수(중앙대)

토론: 배병룡 교수(경상대), 이순자 교수(연세대)

[논단] 제도와 국가발전: I. 국가부문

표준화, 사회통합 그리고 국제경쟁력: 중국의 이동통신 표준화 사례

이희진(연세대 교수)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더라도 국내 제조업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배제한 채 기술 표준을 결정하고 다른 참여국이 이 결정에 따른다면, 한국 기업은 기술 표준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

국제 표준화

- 국가경쟁력

중국의 기술표준 정책: 정보통신기술

-2020년까지 기술혁신에 기반을 둔 사회를 건설하고, 세계 제일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혁신전략

-2009년 R&D 지출액 세계 2위(1540억 달러); 미국 4020억 달러

-2010년 말 과학기술 논문 수 미국 이어 2위

-2012.12 자료 (WIPO), 1위 특허신청국가(52.6만 여건); 미국 (50.4만 여건)

-중국정부는 혁신경제체계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술표준 개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식

-중국의 독자적 기술표준 (1993-2010)

기술	중국 표준	국제 표준
디지털 영상기기	VCD 3.0, CVD, EVD, HDV, HVD, CBHD	SVCD, DVD, Blu-Ray, HD-DVD
무선전화통신	TD-SCDMA, TD-LTE	WCDMA, CDMA2000, LTE
무선랜 암호화	WAPI	IEEE 802.11i
음향 - 영상 암호 / 복호화 (Encoding/Decoding)	AVS	MPEG2, MPEG4-3(AAC), MPEG 4-10(H.264), VC-1
디지털 중계(Digital Trunking)	GoTa, GT800	TETRA, iDEN
문서 형식	UOF	ODF, OOXML
홈네트워킹	IGRS, ITopHome	DLNA, UPnP, KNX, ECHONET
무선전화 충전기	YD/T 1591-2006	없음
모바일 TV	CMMB, T-MMB, CDMB, DMB-T, CMB	DVB-H, T-DMB, MediaFLO
라디오 주파수 식별(RFID)	NPC	ISO 18000 외, EPC/GS1, Uid
보안 컴퓨터 칩	TCM	TPM
무선 도시 지역망	McWill	WiMax

한국에 주는 의미

-기존의 세계 표준화 체제(regime)에 대한 새로운 도전자: 중국, 한국

-한국에게는 경쟁과 협력의 대상

-한중 FTA의 주요 의제

-중국 정보통신 시장 진출

-산업연구원 국제세미나, 2010년 10월 6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한중 산업협력" 중

- 한중 양국이 세계 표준을 선도할 필요
- 유럽과 미국 기업이 표준을 제정하는 독점지위를 타파하려면 한 국가의 기업 힘으로 할 수 없고, 여러 국가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
- 현재 가능한 것은 한중 양국 기업 연합 혹은 타 국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중점은 공동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세계 표준화하는 것임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루티에(吕铁) 실장)

중국 3G, 4G 이동통신 사례

-'The evolution of alliance structure in China's mobile telecommunication industry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elecommunications Policy*, 2012

-중국 3G, 4G 이동통신 표준인 TD-SCDMA 와 TD-LTE의 표준화 과정에서 연합 형성(alliance formation)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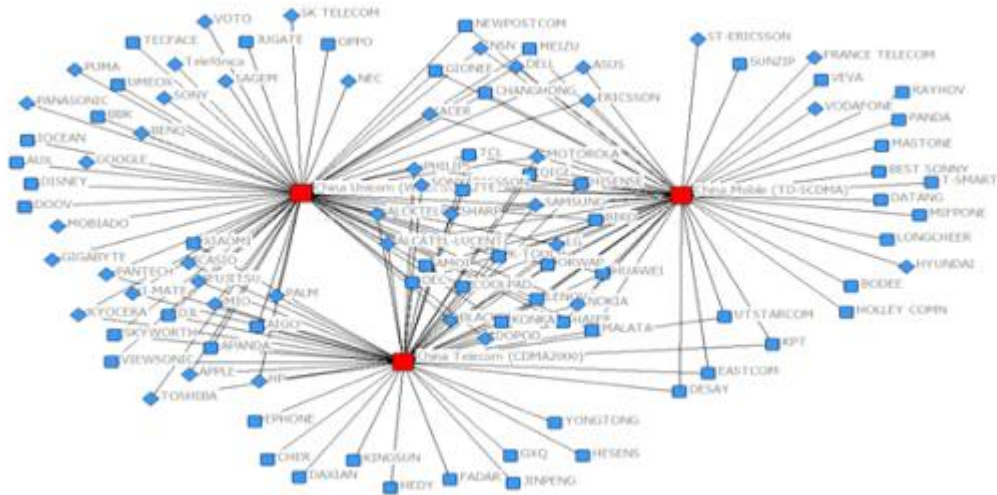
- 이동통신 표준화를 위한 접근 방식에 차이?
- 변화가 있다면, 이는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화 전략에 어떤 함의?

-(국제)표준화에서 기술 우월성은 필요조건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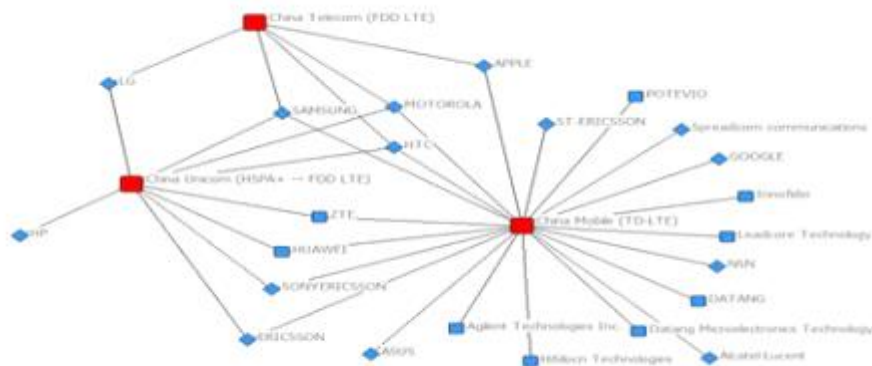
- 정치적 지지를 얻는 능력
- 다양한 이해 집단들에 대한 조정 능력

중국 사례: 분석

3G의 연합 구조



4G의 연합 구조



3G와 4G 연합 구조의 밀도(density) 비교

	Density index	Number of ties
3G	0.0334	372
4G	0.1077	70

밀도: 가능한 총 결합(tie) 수에 대한 실제 결합의 수 비율

-4G > 3G

-네트워크가 밀접하게 짜여 있음

-중심 기업(the focal firm)에게 높은 밀도는, 다른 많은 기업들과 연결이 닿는다는 점에서 지식전수 및 정치적 지지 확보에 효과적임

중국 사례: 토의

- 차이나 모바일의 4G 중심성이 가장 높다
 - TD-LTE의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차이나 모바일의 다른 참여자들에 대한 장악력이 세다
- TD-LTE 4G 낮은 다양성 직접 연결이 다수 (more direct ties)
 - 참여자 간 이해 관계 충돌 가능성 낮음
 - 효과적인 소통(communication)
- 4G 연합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보다 많다
- 기술국가주의에서 기술글로벌주의
 - WAPI 사례와 대비, 학습

중국 사례: 결론

- 중국의 표준화에 대한 접근이
 - 기술국가주의(techno-nationalism)에서
 - 기술글로벌리즘(techno-globalism)으로 전개
- 연합을 형성, 발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 기업과의 연계를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경향
- 국제표준화와 상업화에 필요한 외국 세력의 지원과 협력을 얻기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해 점점 개방적
- 중국 이동통신 표준화 연구에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해서 양적인 접근, 연합 형성을 시각화
- 4G TD-LTE는 아직 초기 단계

4. 나가기

- 한중 FTA 협상
 - FTA 협정 체결을 위한 1단계 협상 마무리
 - 기술무역장벽(TBT)과 지적재산권 챕터를 FTA에 포함
- 중국의 표준 전략에 대한 각국 대응
 - 미국: 자유무역과 경쟁에 반한다
 - EU: 중국의 토착 ICT 혁신 정책과 EU 정책 조화 노력
 - 우리나라는?

미국의 반응

- 미의회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3년 보고서
 - *"The Rise of China in Technology Standards: New Norms in Old Institutions"*
- 평가
 -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수익 창출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 미흡
 -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특허 로열티를 전반적으로 낮추고 라이선싱에 관한 새로운 규범 창출 중
 - MPEG-2 후속 기술인 AVC와 경쟁 가능한 AVS 중국표준 제정으로 AVC 특허 사용료가 기기 당 2.5달러에서 0.15달러로 낮아짐

표준화, 사회통합 그리고 국제경쟁력: 중국의 이동통신 표준화 사례: 토론

이명석(성균관대 교수)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기술 세계표준화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력과 세계시장 및 국제관계에서의 영향력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등장으로 기술 세계표준화 체제의 국제적 판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던 기술 세계표준화 체제에서 중국의 위상이 달라짐에 따라, 한국의 기술 세계표준화 전략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향후 중국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기술 세계표준화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기술 세계표준화 전력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이동통신 사례를 통하여 중국의 기술 세계표준화 전략을 분석하고 있는 이 논문은 매우 흥미롭다. 특히, 기술 세계표준화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정치적 연합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의 3G와 4G 이동통신 표준인 TD-SCDMA와 TD-LTE 기술 표준화 과정에서의 연합형성을 주요 참여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사례를 통하여 기술 세계표준화 전략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적·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기술 세계표준화에서 정치적 지지와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연합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시장 메카니즘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연합을 통하여 세계시장의 판도나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복잡다기한 현대 네트워크 사회에서 세계시장의 판도와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정치적 연합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술 세계표준화에 대한 시장 메카니즘의 영향력 분석을 통하여 추가적인 정책적·전략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기술 세계표준화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술 세계표준화 체제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전략적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국정치체제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때, 중국 이동통신 기술 세계표준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중국과 해외의 이동통신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와 관련 국가의 정책과 전략적 선택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기술 세계표준화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이나 모바일 등 중국의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한 네트워크 분석은 핵심 기업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밀도나 중심성 등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는 네트워크 참여자 또는 노드의 숫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연결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네트워크 참여자 수가 감소한 이유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보완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화, 사회통합 그리고 국제경쟁력: 중국의 이동통신 표준화 사례: 토론

이재열(서울대 교수)

이 글은 기술표준을 둘러싼 경합과정이 제도화되면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하나의 규범이 될 뿐 아니라 근본적인 경쟁의 기본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중요성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해 잘 분석하고 있다. 즉 제도형성의 중요한 축의 하나를 표준화로 잡음으로써, 사회적 다양성이 제거되고, 불확실성과 혼란이 제거되며, 글로벌 표준으로 선택됨으로써 국가경쟁력도 높이게 되는 과정을 중국의 통신시장을 사례로 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통신의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표준화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거세지는 경향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다만 이 연구가 향후 보다 진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민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 내용은 대개 세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표화와 제도화의 의미에 대한 해석부분이다. 필자는 제도화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결론론적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강력한 표준화와 제도화는 다양성을 저해하는 강력한 기준의 독점을 의미할 수 있다. 서로 경쟁하는 잠재적 미래가치를 가진 기술들 중에 일정한 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될 경우, 경쟁적 위치에 있는 잠재적 가치가 더 큰 기술들은 사장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표준화는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점이 좀 더 체계적으로 기술되었으면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기술에 기반을 한 사회통합, 즉 체계 통합(system integration)과 가치나 의식에 기반을 한 통합, 즉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익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Lockwood는 시스템 통합을 표준화의 의미로, 그리고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응집성의 제고를 사회통합으로 구분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키 위해서는 이러한 구분을 일정 정도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네트워크분석에 대한 오해이다. 연구자는 주요한 연구의 이론적 자원으로 네트워크분석을 사용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회귀분석이 이론적 자원이라기보다 분석의 방법이듯, 네트워크분석도 이론적 자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이론과 결합할 수 있는 분석방법에 불과하다. 오히려 연구자가 의도하는 것은 “관계론”적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해서 독립적으로 보면 동일한 기술이나 특성이라 하더라도, 주위 어떤 대상들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그 기술이나 개체가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이나 제약성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관계론”은 명백한 주체와 그 주체의 속성을 타 주체와 구별하는 분명한 경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실체론”과 대비되는 이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기술과 관련된 표준이 형성되는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집중적인 네트워킹 전략이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전 지구적 규범의 확산과 문화적 정당성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논의와는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계 주요국의 기후변화법제

이순자(연세대 교수)

1. 유럽연합 기후변화 대응전략

-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시행하여 국제 탄소시장 선도
- EU 27개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EU-ETS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온실가스의 주요 감축 수단으로 기능
- 그러나 무상할당과 과잉할당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 3기부터 배출권의 유상할당비율 대폭 확대
- 2012년부터 항공부문이 EU-ETS에 편입/ EU와 미국 및 중국과의 갈등 심화
- 1990년부터 배출권거래제에 앞서 핀란드를 시작으로 탄소세 도입
- 유럽연합은 기후변화에 “통합적 접근법”을 전략으로 채택:

ETS, 재생에너지지침, 건물에너지 지침, 자동차 연비기준 마련 등 보완적 수단 제시/ 탄소세 및 에너지세 도입

2. 유럽연합: 20-20-20 패키지법

-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관한 결정(406/2009/EC)
- 출고 승용차의 CO2 배출량에 관한 명령(443/2009/EC)
- 재생에너지의 사용에 관한 입법지침(2009/28/EC)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 및 확대에 관한 입법지침(2009/29/EC)
- 유류 및 가스연료의 CO2 배출량 감축 및 감시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지침(2009/30/EC)
- CO2의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에 관한 입법지침(2009/31/EC)

3.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관한 결정(406/2009/EC)

- 유럽을 고 에너지효율과 저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로 전환시키는데 노력할 것을 강조
-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달성
-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0% 경감한다는 목표 달성
- EU 에너지 소비량 중 20%를 재생에너지(태양열,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수력 및 조력)로 사용
- 출고 승용차의 CO2 배출량에 관한 명령(443/2009/EC)

○ 신규 자동차군의 평균 배출량을 유럽공동체의 총체적 목표인 120g CO2/km 수준까지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 승

용차에 대한 CO2 배출이행요건 수립을 목표로 함

- 2020 이후 신규 자동차군의 평균 배출량을 95g CO₂/km으로 목표설정

-재생에너지의 사용에 관한 입법지침(2009/28/EC)

- 2020년까지 EU 내에서 에너지 전체 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총비율 목표 20% 의무달성
- 각 회원국은 2020년 모든 형태의 운송에서 자국의 재생에너지(바이오연료) 비율이 운송 분야에서 적어도 에너지 최종소비 총량의 10%가 될 것을 보장

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 및 확대에 관한 입법지침(2009/29/EC)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최소 20%를 감축하는 공약을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시설에 대한 배출 허용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1% 이하로 할당

-매년 25,000톤의 CO₂ 상당량에 대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특히 과세와 같은 상당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

-2020년 무상할당이 40%가 되도록 매년 무상할당량을 감소시켜야 함

-배출권의 수익금 중 최소 50%는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 기후변화적응, 재생에너지 발굴, 에너지효율성 지원, 환경적으로 안전한 CCS실행지원, 산림벌채방지 수단 제공 등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저장을 위한 무상 할당은 인정하지 않음

-유류 및 가스연료의 CO₂ 배출량 감축 및 감시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지침(2009/30/EC)

- 연료공급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 생명주기를 연료 및 에너지원의 매 에너지단위 당 10%까지 감축

- 바이오연료 생산은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CO₂의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에 관한 입법지침(2009/31/EC)

-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한 법적 틀 확립
- CCS는 가교적 기술/ 이 기술의 발전이 에너지절약정책, 재생에너지 또는 기타 안전하고 대체가능한 저탄소기술에 관한 연구 및 재정조건을 지원하는 노력을 줄이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됨
- 총 계획저장량이 100kt이하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지침의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 CO₂ 저장과 물기동 속의 CO₂저장은 허용되지 않음

5. 영국: 기후변화법 2008

-제1부 탄소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및 탄소할당

- 2050년까지 1990년 기준 80% 이상 감축
- 이산화탄소 감축 5개년 계획 설정

-기후변화위원회(Climatic Change Committee: CCC)

- 독립적인 기후변화위원회 설립: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 지원

-거래제도

-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되는 거래제도에 관한 제반 규정

-기후변화의 영향과 기후변화에의 적응

-기타규정 (폐기물감축제도 등)

-일반적인 보충규정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규정의 지리적 적용범위 등)

6. 독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2004년)

- 총칙, 배출의 허가 및 감독, 배출권과 할당, 배출권의 거래, 벌칙 등

-기후와 에너지 프로그램 통합 (2007년과 2008년)

-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 에너지이용의 30% 감축 목표(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기술, 에너지효율, 에너지 절약, 건물분야 이산화탄소 감축, 교통 등에 관한 조치들 포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가격이 적절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에너지 개념(Energy Concept for an Environmentally Sound, Reliable and Affordable Energy Supply)

- 2020년까지 1990년 수준 온실가스 40%감축, 2030년까지 55%감축, 2040년까지 70%, 2050년까지 80-95%

감축

-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 18%,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45%, 2050년까지 60% 달성 목표
- 제1차 에너지소비 2008년 이하의 수준으로 2020년까지 20% 감축, 2050년까지 50% 감축
- 교통분야에서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 10% 감축, 2050년까지 40% 감축

-바이오연료 쿼터 법(2009년)

- 2020년까지 바이오연료 17% 함유 목표

7. 프랑스: 환경 그르넬법 I(2009), II(201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1차 국가프로그램 (2000년)

-매 2년마다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2005 Energy Policy Framework Law(2005-781)에 따라)

-교통 혹은 에너지효율 관련 정책들은 2009 그르넬 I 에 의해 이행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같은 정책들은 년 단위 재정법과 관련하여 이행

-그르넬 I: 제1장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제2장 생물다양성, 생태계, 자연지역, 제3장 환경과 건강을 위한 위험방지, 폐기물 예방, 제4장 국가의 시범, 제5장 거버넌스, 정보 및 교육, 제6장 해외영토에 적용되는 규정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23% 목표/ 매년 3% 감축 (그르넬 I)

-초창기 그르넬 I에서 논의된 주요한 제도는 탄소세였으나 그르넬 II에서 폐기(국내의 탄소세 시행에 앞서 유럽연합차원의 유럽 탄소국경세를 주장)

8. 미국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 2009 (안)

- 일명 Waxman-Markey 법안
- 2009년 하원 가결 / 그러나 상원 부결
- 2005년 기준 2020년에 17%, 2050년에 83% 온실가스 감축 목표
- (1) 청정에너지, (2) 에너지효율, (3) 온실가스 감축, (4)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5) 농업 및 산림 부문으로 구분
- 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효율 향상,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목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미국전력법 2009(안)

- 일명 Kerry-Boxer 법안
- 2009년 11월 5일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통과
-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종합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동안, 주정부들이 연합 혹은 단독으로 법 제정 및 정책 도입을 진행

-대부분 제안된 법안은 총량규제방식의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탄소세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

-캘리포니아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GGI), 서부 기후 이니셔티브(WCI) 등 지역적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착수

9. 호주

-기후변화부(Department of Climate Change) 설립(2007년 12월 3일)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보고법(NGER: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을 제정하여 시행 :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형성

- 대규모 기업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에 관하여 보고(제3장)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 수준에 관한 정보를 공개(제4장)

탄소배출에 의한 오염 저감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결정에 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제6장)

-청정에너지 패키지 제정 (2011년 말)

- 탄소가격매커니즘(CPM),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산림부문의 배출감축에 대한 재정지원
- CPM: 탄소세와 혼합된 배출권거래제. 2015년부터 시행예정.

가격상한 설정하여 가격 변동 폭에 대한 관리,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미치는 과도한 피해와 저소득층 등 가계 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대형산업 및 가계부문 보상지원 계획 병행

- CPM을 통해 국가 배출총량의 50% 관리계획/ 동시에 탄소가격을 간접적으로 부과

10. 일본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1998년 제정, 2008년 최종개정)

-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제2장)
- 지구온난화대책 추진 본부(제3장)
-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 등을 위한 시책(제4장)
- 삼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등(제5장)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안)

- 중장기 목표(제2장), 기본 계획(제3장), 기본 시책(제4장)
-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5% 감축/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80% 감축
-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0%까지 달성
-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를 창설/ 재생에너지 전량 고정가격 매수제도의 창설/ 지구온난화 대책세의 검토 등을 기본 시책으로 함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1998년 제정, 2008년 최종개정)

-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제2장)
- 지구온난화대책 추진 본부(제3장)
-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 등을 위한 시책(제4장)
- 삼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등(제5장)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안)

- 중장기 목표(제2장), 기본 계획(제3장), 기본 시책(제4장)
-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5% 감축/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80% 감축
-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0%까지 달성
-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를 창설/ 재생에너지 전량 고정가격 매수제도의 창설/ 지구온난화 대책세의 검토 등을 기본 시책으로 함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천명한 국가 감축 목표의 달성이 거의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근본부터 재검토하는 계기가 마련

-원자력발전 가동률이 극도로 저하되면서 감축대책의 추가적인 실시가 불가피해지면서 좀처럼 진전이 없던 지구온난화대책세가 2012년 4월 드디어 국회 통과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2030년까지 원자력 제로 시나리오의 달성을 고려한다는 결정

-국가 단위 도입에는 실패하였으나, 2010년 초부터 동경도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11. 시사점

-각 국의 기후변화대응 법제의 수립 및 이행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제가 수립되어 있음

-한국은 2010년 기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563백만 톤의 CO₂를 배출하였으며,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46% 증가(KEI, 2013)

-2009년 부터 2010년 사이에 두 계단 상승(9위→7위) 하였으며, 한국은 증가세를 보여 2020년 이후에는 6위로 상승할 전망(KEI, 2013)

-그렇다면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재생에너지 공급체계의 변화

- FIT(Feed in Tarriiff:발전차액지원제) ⇄ 2012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공급의무할당제도)로 변경

- 하지만 RPS ⇄ FIT 역전환 필요?

- FIT의 장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단기간에 급성장

재생가능에너지원의 소규모 분산가능성 높음

투자 신호로서의 확실성 및 단순성

○ FIT의 단점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목표설정 및 달성의 불확실성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유인 부족

지원금 규모 및 예산 설정 곤란

○ RPS의 장점

대책효과의 확실성

비용절감 인센티브 부여

시장여건 형성이 비용효과 발생 가능

가격 수준의 유연성 확보

○ RPS의 단점

경제성 위주의 특정 에너지 편중(환경훼손과 주민갈등 유발)

거래 메커니즘 등 관련장치 필요

소규모 지역이나 주민 참여를 통한 에너지 자립의 어려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 전력요금체계?

○ 탄소세?

-CCS(carbon capture & storage) 관련 규정 마련 필요

○ 다른 국가의 법률들은 CCS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 우리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CCS를 다루기 위해 관련 법제마련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저장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안』용역 발주

-기후변화관련 법제와 국제통상법 충돌부분 고려 및 대응방안 마련

○ 근거 :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 보조금 협정)”

○ 금지보조금

지급하거나 유지해서는 안 되는 보조금으로서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수출보조금)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수입대체보조금)

○ 조치가능보조금

타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타 회원국의 양허 혜택 무효화 혹은 침해

타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실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는 보조금

12. 녹색성장 관련 사례분석

-보조금과 관련된 WTO 분쟁사건

-1995년~2012년 8월 까지 442건 제소됨. 그 중 92건이 보조금과 관련됨

-캐나다 재생에너지 사건

○ 캐나다 Ontario 중에서 실행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비차별적 원칙 위반 이유로 WTO에 제소

○ 이유 : 정부가 재생에너지 판매를 보증하는 형태의 보조금 자체 보다 동 보조금이 Ontario 주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공여됨

○ 국산화조건이 차별적이며, 수입대체적 효과를 야기

○ 진행 상황 : 협의 단계를 넘어 패널절차에서 진행 중

○ 중국의 풍력장비 사건

○ 중국 정부가 2008년 부터 운영해 온 특별기금을 통해 풍력장비 생산업체들에게 국내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

○ 패널단계 전에 중국이 풍력보조금 프로그램 폐지 약속으로 양자 합의

-평가

○ 녹색성장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수출보조금이나 수입대체보조금의 지급을 자제할 필요성 제기

세계 주요국의 기후 변화 법제: 토론

배병룡 교수(경상대 교수)

현재 세계는 온실 가스가 급증하고 그로 인해 지구 온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북극의 빙하가 녹아 내려 남태평양의 섬국가가 수장되어 소멸되고, 수백 년 후에는 뉴욕이나 런던 또한 수장될 위험에 처해있다. 이미 1960년대 초 로마클럽에서 자원 고갈과 같은 생태계 위험을 경고하였으나 그 이후 30년이 지나서야 리우회의에서 유엔차원(환경개발회의)의 기후 변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중반에는 선진 여러 국가들이 교토의정서를 발표하였다. 교토의정서 이후 10년이 지난 2000년대 중반인 2005년에 유럽 여러 국가들이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이 제도들은 국제간 또는 국가 내부에 국한되는 제도들이다. 그 구체적인 제도들은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에너지세, 발전차액지원제도, 공급의무할당제도, 고정가격매수제도 등 여러 가지이다. 이 제도들은 법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분과 학문들이 그 제도들 거의 모두 또는 일부에 관여하여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국가들(또는 EU와 같은 국가연합)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내용들(제도 포함)을 소개하고 비교하고 있다. 각국의 법률을 단순히 소개하고 비교하는 점에서 현재의 법제 현황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제도적 시각이나 산업화 정도 또는 국제 관계에서의 국가 권력의 시각에서 각 제도의 채택이나 시행에 관련된 논의를 더 해보면 보다 풍부한 기후 변화 관련 법제적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제도의 발안과 형성에 관여한 국가들이 어떤 이익을 염두에 두고 향후 이행할 제도와 그 이행 정도를 설정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선진산업국가들이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가 아니면 아프리카의 후진국들이나 인도, 브라질, 중국과 같은 거대한 크기의 개발도상국가들이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가? 서유럽국가들이 대부분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를 형성해 왔는데 이들 국가들은 자신들의 발전 수준을 유지하려고 나아가 전 세계의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 에너지의 약 28%를 소비하는 강대국인 미국은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였을 뿐 아니라 기후 변화 대처에 소극적이다. 그리고 현재 개발도상국들은 아직도 산업화를 심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들의 채택과 이행에 소극적일 수 있다. 그 제도의 형성, 채택 및 이행에서 국제 정치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다(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시각에서의 제도정치론).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 문턱에 있는 국가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하나의 문화로서 그러한 제도들을 채택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몇몇 법률(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제정하고 그 시행령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이를 강력하게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장식물로 남겨둘 것인가?(사회학적 시각의 신제도주의에서의 신화 및 당연성 논리)

아울러 하나의 국가 내에서도 공급의무할당제와 같은 제도의 채택이나 이행에서도 그 제도에 관련된 특정 기업들은 국가 및 다른 기업들과 이익 다툼을 전개할 것이다. 여기서 또한 기후 변화 제도의 채택과 이행을 둘러싸고 정치적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다. 정치학, 행정학, 정책학 등은 권력이나 공공 제도 관련 학문들로서 바로 이러한 과정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법학은 법률 이해를 위해 이러한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더 나은 법철학과 법집행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과 민주주의 의식의 변화

윤성이(경희대 교수)

19세기 산업화 혁명과 함께 탄생한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21세기 정보사회에서도 여전히 적합한 정치제도일

까? 우리나라가 각종 민주주의 지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면서도 정부와 정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왜 날로 떨어지고 있을까?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투표 참여율은 날로 하락하고 있는데, 비제도적 정치참여인 길거리 시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본 연구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가져오는 정치의식 및 정치참여 행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네트워크 방식의 정치참여와 대의민주주의 제도 간의 충돌지점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어떤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에 대한 탐색을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여부와 민주주의 개선방안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의 집단을 구분하였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정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현재 민주주의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 민주주의 발전방향은 올바른 대표의 선출이 아닌 시민 참여의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④불만족 x 참여지향 집단이다. 이들 집단이 설문결과로는 22.4%로 그리 많지 않으나, 문제는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SNS를 많이 이용할수록 ④불만족 x 참여지향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참여지향적 성향 가진 집단의 평균 연령은 39세인데 비해 ①만족 x 대표 집단의 평균 연령은 50.55세로 나타났다. 또한 ④불만족 x 참여지향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사회질서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그리고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의 가치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2040세대와 5060세대의 갈등이 단순히 선호 정당이나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의식의 차이에 까지 이르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집단 간의 SNS 이용의 차이 역시 분명히 드러났다.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고 대표보다는 참여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자들은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경제성장보다는 환경보호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자들은 또한 정치참여에 보다 적극적이며, 시위참여의 경험 역시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결정론 혹은 절충적 시각에서 비취볼 때 SNS 기술 자체에 내재한 네트워크 특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결국 SNS 이용이 확산될수록 시민들은 정치적 소비자에 머물기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선호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산업사회의 대의민주주의 모델과 충돌할 여지는 더욱 커질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환경의 확산에 따라 시민의식은 의무적 시민(dutiful citizen)에서 자기실현적 시민(self-actualizing citizen)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변화는 리더십에 대한 인식과 시민으로써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대의민주주의제도가 소셜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기에는 정치환경과 시민의식의 변화가 너무나 크다. 기술결정론뿐 아니라 사회결정론 시각에서도 기술과 사회변화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치제도 역시 기술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함께 변화해 가야 한다. '대표' 중심의 위계적 권력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제도와 분산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SNS 정치참여 간의 충돌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결국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의 개선보다는 개인의 정치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참여민주주의 모델을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과 민주주의 의식의 변화: 토론

김재한(한림대 교수)

윤성이 교수의 발표는 '소셜네트워크와 민주주의'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윤교수님 원고는 이미 학술지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수정이나 보완의 차원보다, 윤교수님 논문 내용을 토론자의 선행연구와 대조하는 차원으로 네 가지만 언급하겠다. 분석차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두 옳은 분석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첫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의 개선보다는 개인의 정치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참여민주주의 모델을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윤성이 연구의 결론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이용한 김재한의 연구(『대한민국 국회, 불신과 양극화』, 한림대학교출판부, 2012)는 대의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유권자일수록 정치를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매우 나쁘게 생각하는 유권자 가운데 다수(49.3%)는 의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의회 및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를 좋다고 생각하는 유권자 가운데 의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8.8~22.4%에 불과하였다. ...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교육이(정치) 불신을 일부 해소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김재한)

둘째, “SNS를 많이 이용할수록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면서 올바른 대표의 선출이 아닌 시민) 참여 지향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윤성이 연구의 진단이다. 김재한 연구는 “인터넷을 접속하는 사람일수록 의회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신문 이용자일수록 의회를 더 불신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터넷과 신문의 잦은 이용이 의회 불신과 관련 있어 보이는 반면에, TV나 라디오 시청자들이라 해서 의회 불신이 더 높지는 않”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 추락하였다. ... 한편 개인의 정치효능감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윤성이). 이에 대조적으로, “남궁근 등(1991)에 따르면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국회에 대한 규범적 신뢰가 높았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더 체감하도록 할 수 있다면 국회 불신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김재한).

넷째,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의회 신뢰 수준은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이다. ...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의회 불신이 높다는 사실은 ... 의회 불신이 민주주의에 필요악이라는 개념, 또 의회 신뢰수준이 실제 의회 업무수행의 사후 평가 대신에 사전 기대 수준이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즉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의회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고 또 그러한 낮은 기대는 실제 민주주의에 긍정적으로 기능하기도 하는 것이다.”(김재한)

제도의 선택과 정치적 역동성: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사례

고상두(연세대 교수)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인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을 부여한 나라는 드물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 주민들에게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역외국가 출신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사회의 외국인 거주자 실태를 고려해볼 때, 이러한 제도는 매우 의외적인 현상이다.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소수이며,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당시에는 그 수가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므로 그 당시 정주 외국인의 선거권 문제는 한국인의 관심대상이 아니었고, 외국인들의 요구사항도 아니었다. 또한 한국은 오랜 단일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열린 시민권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서 어떻게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참정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제도선택의 배경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며, 분석대상으로는 한국에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게 된 제도적 선택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왜 한국은 외국인 주민에게 참정권을 제공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외국인의 참정권 부여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해보면, 주로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국민 주권과 보편적 인권이라는 대립적 근거를 가지고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일 관계 속에서 외국인 선거권의 부여 배경을 설명하려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외국인 선거권의 규범성이나 국제성 등의 관점에서 법제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의 독창성은 국내거주 외국인 참정권 부여 배경을 타이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는데 있다. 다시 말하자면, 아마 2005년에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참정권을 갖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당시의 법제정은 우연성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며, 당시의 타이밍을 놓쳤다면 외국인 참정권이라는 제도의 변화는 현재까지 일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가 유용한 분석틀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 활용하고자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발전을 시간과 함께 전개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시간을 중요한 분석차원으로 중시한다. 역사를 시간적으로 구성된 과정으로 이해하고, 정치발전이란 시간을 거치면서 법, 정책, 규범 등과 같은 제도에 구현되는 것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면서 제도주의적인 접근법이다. 즉 정치체제와 정책은 시간이 투영된 제도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물역사적 분석에 대해 비판적이다. 정치발전 중에는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제도의 선택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제도의 선택도 그 변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란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와 같은 시간적 경과에 대한 연구관심을 가지고 있는 접근법이다. 그리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개념으로는 경로의존성을,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는 중대국면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동안 역사적 제도주의가 시간 보다는 제도에 더 많은 연구 분석을 해왔다는 비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 글은 외국인 선거권 도입을 시간적 측면에서 특히 타이밍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아울러 변화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고, 변화의 양태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변화의 발전방향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제도의 구조를 이익과 가치 메커니즘으로 세분화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의 참정권 부여라는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타이밍으로 작용한 사건은 재일한국인의 참정권 획득 운동과 이를 도우려는 한국의 초당적 지원이었다. 변화가 발생한 영역은 이익 메커니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왜냐하면 재일 한국인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국제적 이익이 변화의 동기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익추동적 변화가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사회에서는 정치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초래되지 않았고, 이러한 변화 양태는 제도의 변화가 별다른 정치적 마찰 없이 진행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의 제도변화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어두운 전망을 하게 된다. 다수 세력의 이익에 의해 추진되고 관철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참정권이 더 이상 발전적인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한번 부여된 선거권이 폐지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참정권은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의 권리가 없는 제한적 선거권인데, 이러한 제약이 해소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외국인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도 인다.

가치 메커니즘이란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외국인 참정권 문제가 주로 학술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관심하거나 이상적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오늘날 국내에 영주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들의 외국인 접촉 빈도가 늘어나고 그것에 비례하여 외국인에 대한 호감 못지않게 반감도 커지는 등 외국인 선거권 문제를 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참정권에 반대하는 가치가 생겨나면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재일 한국인의 선거권 부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난날의 타이밍을 놓쳤더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참정권 부여라는 제도의 선택은 없었을 것이다.

제도선택과 정치적 역동성: 토론

김종성(충남대 교수)

1. 세 가지 신제도주의의 구별

신제도주의의 세가지 유파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각 다른 궤적을 그리며 발전해왔으며, 그 중에서도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방법론상 분석의 단위와 수준에 있어서 극단적인 차이가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 두 가지 이론적 특성을 적절히 혼용하고 있으나, 역사적 제도주의 자체가 단순한 혼합물은 아니며, 앞의 두 이론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이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대표하는 '이익'과 '가치'라고 하는 분석기준을 물리적으로 혼합하여도 역사적 제도주의가 생성되지는 않는다. 단순히 두 가지 접근방법을 혼합하는 것은 각각의 장점을 차용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단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참정권제도를 통한 정책결정집단의 이익(선호)이 바뀌었거나 공유하는 가치(정당성의 기반)가 바뀌어

서, 제도가 변화하는 것은 각각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시하는 제도의 변화이며,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시하는 제도의 변화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제도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제도의 변화, 즉 punctuated equilibrium, critical junctures, branching point 등은 일반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위기나 군사적 갈등과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위기란 위기란 “정당한 강제력 사용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변경시키는 국가의 능력에 갑자기 도전하는 사건”을 뜻한다(Skowronek, 1982: 10). 위기는 내부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야기될 수도 있다. 내부적 위기는 사회 내부의 역동적 변화에 의해 촉진되며, 외부적 위기는 국제체계로부터의 위협에 의해 국가의 추출노력이 증대하고 이에 대하여 사회적 저항이 발생하는 경우이다(Krasner, 1984: 234). 따라서 제도의 변화는 계속적이고 점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급격하고 간헐적으로 일어난다. 외국인참정제도의 변화를 둘러싼 여건 내지 상황의 변화는 국가의 정당성 위기를 초래할 만한 위기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책결정집단의 이익이나 가치가 급격하게 변화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3. 제도와 제도적 맥락의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과거의 제도와 제도적 맥락에 의해 새로운 제도가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형성(제도의 변화)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제도 및 제도적 맥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분석이 필요하다. 외국인참정제도가 도입(형성)된 2005년까지 정책결정집단을 둘러싼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제도적 맥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여야 한다. 2004년 주민투표법의 제정을 통하여 외국인의 주민투표를 허용한 것은 외국인참정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재일한국인의 참정권을 둘러싸고 전개된 한일관계에서의 전략적 상호작용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변화를 비롯한 제도적 맥락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역사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참정제도가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역사적 제도주의에 부합하는 설명이 될 것이다.

제도선택과 정치적 역동성: 토론

이영철(전남대 교수)

고상두 교수의 “제도선택과 정치적 역동성: 외국인 지방선거법 부여의 배경”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인정한 제도선택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예외적이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대단히 흥미로운 사례이다. 저자는 제도적 선택을 정치체제와 정책에는 시간이 제도화 되어 있다고 보는 역사적 제도주의적 관점에 따라 설명하며, 사례 분석에 있어서는 타이밍에 초점을 둔다. 저자에 따르면, 역사적 제도주의적 분석은 제도의 초기조건, 결정적 변곡점, 새로운 제도의 정착이라는 3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변곡점(critical junctures)의 이해가 중요한데, 변곡점은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의 메커니즘에 변동이 생겨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한 2005년 8월의 공직선거법 개정은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운동에 의해 추동되었다. 1997년, 1999년 한일의원연맹에서의 참정권부여요청과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높은 관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자치의 길을 열어주자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2001년 11월 관계법안이 국회 소위원회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2002년 2월 법사위는 외국인 참정권 부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안을 부결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그 이유는 외국인 참정권 부여 문제는 이익갈등은 낮았으나, 가치메커니즘의 측면에서 제도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담론이 약했기 때문이

다. 2005년 다시 같은 법안이 제안되었고, 그 해 8월에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2005년은 제도 선택에 있어서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롭고 예외적인 이 제도선택에 대해서 기존의 설명은 외국인의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틀에서 설명해 왔는데, 저자는 타이밍과 변곡점이라는 시각을 통해 이를 더 잘 설명하고 있다. 토론자로서는 이런 설명이 역사적인 관점을 중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설명보다 우수하다고 보지만, 두 가지 점에서 세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첫째,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Critical junctures를 결정적 변곡점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토론자는 중대국면이 보다 의미를 잘 전달한다고 본다. 중대국면은 사회가 서로 다른 다층의 구조 혹은 질서(multiple structures or orders)로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서로 다른 구조가 서로 연결된 그러나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특정한 상황에서 충돌하거나 결합되면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 때 이를 Critical junctures라고 부른다면, 이를 중대국면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사실, 외국인 참정권의 부여는 저자가 적절히 지적한 일본 안에서의 재일 한국인의 움직임과 더불어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민주주의의 질서의 확립, 김대중 정부의 집권, 당시 의회의 정당분포, 그리고 민주화 과정의 성과물인 헌법재판소라는 새 제도를 빼놓고는 논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국내적인 정치, 제도, 시대정신적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개념이 critical juncture이고, 이는 중대국면이란 용어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저자가 지적했듯이 시간/타이밍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화나 제도적 선택을 설명할 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타이밍이 조금은 단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제도적 선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타이밍은 2002년~2005년이다. 당시 일본 내에서의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 요구가 일종의 상수로 작용하였다면, 또 김대중 대통령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면, 2002년에 부결된 개정안이 2005년에는 어떻게 통과되었는가에 설명의 초점이 놓여야 한다. 저자는 타이밍의 폭을 넓게 잡았기 때문에 1997년~2005년을 하나의 타이밍이 작용하는 기간으로 보았을지도 모른다. 토론자가 보기에 이 사례의 설명에 있어서 중요한 타이밍은 2002~2005년이다. 당시의 정치적 문제를 되돌아보면, 야당으로서 최초로 집권한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 이어, 같은 정파의 노무현 정부가 그 뒤를 이었고(2003), 소수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었다(2004).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구성을 보면, 2005년에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이 다수를 이루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시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심판, 신행정수도 관련 심판, 재외국민 참정권 심판, 대통령(노무현) 탄핵 심판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쟁점적인 사안에 대해 중요한 심판을 내리던 시기였다. 그렇다면, 외국인참정권 부여 결정도 이렇듯 여러 제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던 2002~2005년의 타이밍 속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역사적 제도주의는 종종 역사적 연속성을 설명하는데 활용되어 왔는데,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대국면이란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제도변화를 설명하는데 이론적으로 취약하다는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중대국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중대국면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추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논의는 본 토론의 사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적 인권거버넌스의 특징과 아시아지역으로 확산 가능성

서창록(고려대 교수)

1. 국제인권레짐이 한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인권거버넌스의 특징을 파악하고 아시아지역으로 확산의 가능성과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최근 변화된 국제 환경과 다양한 행위자들, NGO의 수적 증가와 함께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
 - 기존의 하향식(bottom-down) 정책 결정 방식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상향식(bottom-up) 조정 양식으로 패러다임 변화
 - 한국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강한 시민사회 역량의 인권 거버넌스 성장을 이

록

2. 한국적 인권 거버넌스

- 거버넌스의 요소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 인권 거버넌스

- 한국 인권 거버넌스의 발전은 시민사회 발전과 함께 성장
- 민주화 운동에 수렴되었던 다양한 시민사회의 각 영역이 다양한 국제 이슈에 눈을 뜨게 되었고 국제규범과 원칙을 국내에 동원하기 위한 국제연대활동에 주목
- 다양한 NGO 간의 활발한 참여와 자율성은 자발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발전
-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자발적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권 거버넌스는 점진적인 인권문제 개선을 경험



국가인권위원회

- 2001년 11월 국가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
-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한국 내 세계 인권 정신의 실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더불어 인권문제 개선의 적극적 의지를 나타냄

1972년 계엄령 선포 이후 국민의 근본적 민권과 자율권을 박탈함으로 미국은 한국의 인권문제에 비판을 가함

- 이에 한국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은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
- 90년대 들어 국제인권협약의 비준은 정부의 대외정책 일환으로 정부주도의 하향식으로 결정
- 당시 한국 외교의 중요한 과제들 중 하나인 UN가입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침
- 1991년 UN 가입을 전후로 한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에 가입 등 신 외교를 추진

주요 국제 인권규범	가입일	발효일
인종차별철폐협약	1978.12.5	1979.1.4
여성차별철폐협약	1948.12.27	1985.1.2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1990.4.10	1990.7.10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1990.4.10	1990.7.10
아동권리협약	1991.11.20	1991.12.20
난민지위협약	1992.12.3	1993.3.3
고문방지협약	1995.1.9	1995.2.8
장애인권리협약	2008.12.12	2009.1.10
이주노동자협약	논의 중	

1990년대 후반에서부터 2000년대 들어서 국제인권규범과 관련한 비준, 이행 과정에 있어서 정부주도하의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의 협조적 결정으로 전환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의

- 인권관련 NGO의 등장 및 팽창은 인권의식 향상으로 더욱 활성화
- NGO를 비롯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제인권규범의 비준을 촉구하고, 이미 비준한 기존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적절한 이행을 촉구

2000년대 가입한 장애인권리협약은 성안과정에서부터 국내 비준 및 이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의에 의한 상향식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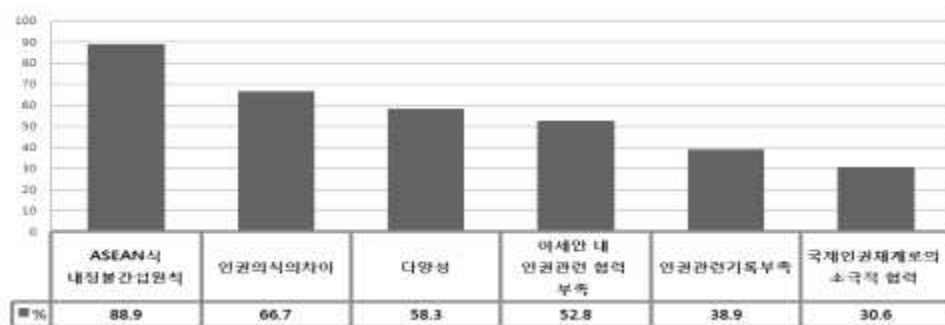
한국은 2009년 1월 10일에 발효

- 국내 협약 비준 과정에 있어서 NGO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비중이 증가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인권규범과 성안, 비준, 이행에 있어서 참여성의 증가
- 국제인권규범의 관련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꾀하고 있는 정부의 통합 및 조정기능
- 상호간 네트워크 정보와 자원의 공유를 통해 형성된 공통된 목적과 주제를 효과적으로 연대함

3. 아시아 지역 내 인권 논의

-아세안 지역 내 인권 거버넌스

- 2009년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AICHR) 발족
- 자문기관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없음이 근본적인 한계



- 1997년 이후부터 진행된 ASEAN+3 (한국, 일본, 중국) 협력 도모는 정책, 경제, 안보에 주목 하고 있으나 인권과 관련한 협력에 소극적
- 인간안보심포지움 개최 후 빈곤과 여성 관련 주제는 다루나 인권과 관련하여 민감한 이슈 영역인 난민이나 이주노동자와 같은 주제는 제기된 바 없음

4. 한국적 인권 거버넌스 확산의 방향과 가능성

-한국은 민주화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발전, 네트워크, 참여성, 자율성의 증가 등을 바탕으로 지역차원의 인권보호체계가 없고 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아시아 지역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인권 개선의 가능성을 위한 조건

- 인권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전 인류에 적용 가능하며 인권의 보편성이 존재함을 인식
- 국가주권을 초월한 초국적 인권에 대한 국가간 교류를 통해 인권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

-아시아-태평양의 난민 NGO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별 주제별 협력 강화를 위해 2008년 말레이시아에서 출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례

- 난민 문제가 심각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위한 정책제안, 정부감시와 실제적인 NGO 역량 강화를 꾀함
-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와 확장에 주력
-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꾀할 뿐 아니라 정부부처나 국제기구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아시아 내 인권레짐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

- 자발적 시민사회 발전의 역동성과 거버넌스의 발전 모습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리더십을 제시
- 한국적 인권 거버넌스의 확산을 논하기 위해서는 보편성과 국가주권을 넘어서 초국적 인권의 존재가 인정 되어야 함
- 인권 이해를 위한 공통된 기반 구축 (자발성, 참여성, 네트워크)가 필요

○ 아시아 지역내의 인권 문화 창출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잠재력 기대

한국적 입헌주의의 제도화 : 1814년의 구조를 넘어서

송석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리나라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지위를 행정부의 수반일 뿐 아니라 국가의 원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원수라는 표현은 미국 등 전형적인 대통령제국가에서는 낯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대헌법 중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했던 제헌헌법은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했으며 이는 1962년헌법에서도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현행헌법의 조항은 1972년헌법에 도입된 것을 현행헌법 제정시에 근본적인 논의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의 원수라고 규정하는 것은 일부 입헌군주제헌법에서 군주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했던 전통과 맞닿아있다. 입헌군주제헌법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는데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일본의 입헌군주제헌법을 분석하면서 유형화를 시도하면 입헌군주제헌법은 국민주권형과 군주주권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국민주권형 입헌군주제는 국민주권에 기초하므로 의회 뿐 아니라 군주와 행정부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에 의한 대표체일 뿐이다. 이러한 유형의 입헌군주제헌법으로는 프랑스 1791년헌법, 프랑스 1830년헌법, 벨기에 1831년헌법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군주주권형 입헌군주제는 군주제원리에 기초하는 것으로 프랑스 1814년헌장, 바이에른 1818년헌법, 독일 헌법 및 헌법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일본 메이지헌법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프로이센 1850년헌법은 두 유형의 요소를 모두 지녔지만 이후 해석론에 의해 군주주권형으로 이해되었다.

국민주권형 입헌군주제에서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치권의 근거로서 기능한다. 이에 반해 군주주권형 입헌군주제에서 헌법은 단지 선제하는 통치권의 제한으로서의 기능만을 한다. 따라서 헌법은 모든 통치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자의 경우 군주를 국민의 군주라고 불렀던데 반해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의 군주라고 칭했다.

군주주권형 입헌군주제헌법의 특징으로 우선, 군주는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권력의 모든 권리를 자신에게 통합하는데 단지 입헌군주제 하에서 군주가 자신이 제정한 헌법전에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는 이른바 군주제원리에 기초한다. 또한 군주주권형 입헌군주제헌법에서는 군주제적 관료국가가 “중립적”인 존재로서 시민사회의 다원성 위에 군림하며 군주는 외교권 뿐 아니라 행정권내부의 권한, 특히 군통수권에서 초헌법적인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입헌주의의 주체인 시민계급이 정치적 자유주의와 결별하고 경제적 자유주의에 만족하게 되어 시민사회의 공적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자체적인 갈등조정 능력이 미약한 채로 남게 된다.

하지만 입헌군주제헌법은 어떠한 유형이든 군주와 의회가 경쟁하는 이원적 구조를 지녔다. 이는 군주와 의회가 동등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양자의 비중은 개별헌법의 조문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었지만 의회가 지니는 재정에 관한 권한이 군주의 행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북유럽의 국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입헌군주제헌법을 분석한 결과 양자의 차이는 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양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점진적인 개혁을 통한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화기초기에 유길준 등에 의해 서구의 입헌군주제헌법이 군민공치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가장 바람직한 통치형태로 이해되었다. 한편 20세기 초반에는 유치형 등을 통해 일본 메이지헌법의 군주주권형 입헌군주제헌법이 소개되었다.

현행 헌법의 제정과 함께 민주화가 정착됨으로써 5년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행정부의 수반이자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넘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전체의 정치공동체를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중립적 조정자로서의 국가로 분리하여 인식하려는 국가주의적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공무원이나 교원 역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독점하려는 경향은

군주주권형 입헌군주제에서 유래한다. 또한 최근에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탈정치화하자는 주장도 이러한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군주주권형 입헌군주제적 전통은 독일 프로이센에서 일본 메이지국가로 연결되는 효율적인 근대화모델과 닿아있다. 이제 효율적인 근대화와 함께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군주주권형 입헌군주제헌법과 연결되는 우리사회의 국가주의를 돌아볼 때이다.

한국적 입헌주의의 제도화: 토론

장용석(연세대 교수)

헌법 학자인 송석윤 교수 발표 논문인 ‘군민 공치와 입헌군주제 헌법 - 비교헌정사적 연구’는 입헌군주제의 헌정사적 의미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을 시도한 흥미로운 연구다. 저자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일본의 입헌군주제헌법을 비교분석하여 국민주권형과 군주주권형으로 유형화했다. 유형 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입헌군주제헌법은 공히 군주와 의회가 경쟁하는 이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군주주권형 입헌군주제의 전통에서는 강한 행정관료제도에 비해 시민사회와 의회가 취약함에 주목하였다. 또한 저자는 권위주의적이고 군주제적인 대통령제의 전통이 남긴 제도, 문화 및 헌정현실을 개선하는 일이 주요한 과제임을 제안하고 있다.

입헌군주제의 비교헌정사적 분석을 제공한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 이론틀에 기반한 국가 및 조직 거시비교연구를 수행하는 본 토론자에게 흥미로운 두 가지 후속 논의를 떠오르게 한다. 첫째, 헌법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이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해석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양한 국민국가가 출현하면서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들은 자국의 헌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의 일본 사례가 그러했던 것처럼, 신생독립국들은 헌법을 제정하면서 선진국 혹은 주변국들의 헌법을 참고하게 된다. 헌법 제정뿐 아니라 개정시에도 자연스럽게 모델이 될 만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헌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제도적 상호참조와 학습은 국가 간 헌법의 유사성을 증가시켜왔다. 이처럼 전 세계 헌법들이 어떻게 개별 국가의 역사적 특수성을 극복하고 보편적 원리를 담아내며 유사해 지는지 그 과정과 동력을 살펴본다면 송석윤 교수가 제안하는 유형화만큼 의미 있는 비교헌법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역사적 특수성과 법의 보편성이 교차하는 현 지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다. 본 논문도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성과 특수성에 대해 토의하며 한국적 입헌주의 제도화의 미래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고 있다. 헌법 역시 여타 제도처럼 개정과정을 통해 변화해가는 동태적 특성이 있기에 각국의 헌법은 개별 국가의 특수성과 헌법질서의 보편성이 중층적으로 적용되는 다중질서(multiple orders)의 영향하에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61조에 명시된 국가원수의 절대적 역할이 국가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이라면, 이러한 절대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군주와 관료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노력은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 헌법이 추구하는 보편성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왕, 엘리트, 지배계급의 절대 권력은 축소되고 국민주권이 강조되는 추세, 대통령이나 군주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고 의회와 지방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양상, 외국인 참정권 논의를 통한 국민개념의 확대, 보편적 인권의 강조 등은 헌법이 보편적 규범들을 담아내려는 전 세계적 추세로 독해될 수 있다. 이처럼 개별 국가의 특수한 역사성이 제공하는 ‘헌법의 다양화 동학’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헌법의 동형화 추세’를 함께 고려하는 거시적 조망은 대한민국 헌법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논단] 제도와 국가발전: II. 시장 및 시민사회 부문

지배적 디자인의 생성과 변화

김길선(서강대 교수)

현대인들의 일상생활과 많은 부분을 함께 하고 있는 각종 기술들은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발전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사회를 더욱 윤택하게 해주고 있다. 인간의 삶과 함께 하는 자동차,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TV 등을 이루고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해양자원 채취선박인 드릴쉽, LNG선박, FPSO선박, 극해 운항용 쇄빙선 등을 이루고 있는 기술 역시 현대 사회와 인간 생활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팀은 지배적 디자인(Dominant Design)의 개념 하에서 사회와 인간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이 경쟁을 통하여 진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에 단기적 목표를 두고 있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생태계가 고른 발전을 통하여 건강한 방향으로 진화함과 더불어 이것이 사회의 발전과 진화의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경영학적 관점에서 국가적 제도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장기적 연구목표로 하고 있다. 지배적 디자인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술을 제품기술과 공정기술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기업이 기술을 제품과 공정으로 형상화해가는 과정을 이해하면서 기술과 사회 간 점점의 생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가 경쟁을 통하여 발전과 쇠퇴를 반복하며 진화하듯이 기술과 제품 그리고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들도 경쟁의 결과로 지배적 디자인이 되거나 쇠퇴하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 진화한다. 제품 본연의 기능과 관련된 기술을 제품기술이라고 할 때, 개방형구조, 협력성, 응용성의 특성이 강한 기술이 기술 자체의 발전과 진화에 유리하여 지배적 제품기술의 위치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술의 집합체인 제품은 폐쇄적인 구조보다 개방적인 구조일 때 기업생태계 내에서 다수의 협력자들과 상호 발전을 자극하는 협력이 유리하다. 개방형 구조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LCD 기술은 TV, 모니터,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전자시계 등 다양한 제품들에 활용될 수 있는 높은 응용성을 지님으로서 PDP기술과의 지배적 디자인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 또한 개방형 구조, 협력성, 응용성의 특성을 지닌 기술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용이하므로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반면 폐쇄적 제품구조를 지닌 PDP 기술은 개방형 제품구조를 지닌 LCD와의 경쟁에서 패배하여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편, 제품을 조립하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정기술의 경우에는 한국 조선 산업의 공정기술 발전과정을 고찰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공정기술의 발전과 진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진은 한국의 조선 산업이 원가절감 중심의 공정기술에서 공정디자인혁신과 융·복합혁신의 공정기술로 진화하면서 지배적 공정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 조선시장에 처음 진출한 1970년대 초반, 조선업 후진국으로서 저렴한 노동력을 경쟁력으로 하여 선진국에서 이전받은 기술로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 운반선을 생산하는 정도에 그쳤었다. 그러던 한국의 조선 산업은 그동안 축적해온 선박 건조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존의 조선 강국들도 구현하기 힘든 생산기법인 공정구조를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공정들을 서로 융·복합하는 획기적인 발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기술력으로 세계의 조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약 30년간 축적해온 공정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2000년 이후 공정디자인혁신(원모듈 공정기술, 메가블록 공정기술)과 융·복합기술혁신(드릴쉽, FPSO)으로 세계최초·세계최대의 수식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기존 선진국들조차도 구현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지배적 공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조선 산업의 경쟁자들은 한국 조선 기업들이 이룩해 온 공정기술 발전 궤도를 따르게 될 것임을 조심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기술은 기업에 의하여 제품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전달되면서 사회와 연결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이 가진 특성이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나 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특히, 지배적 디자인의 위치에 올라선 특정 기술 혹은 제품이 갖는 특성은 이러한 네트워크와 생태계의 구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 생태계 내에서는 대·중·소기업들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중심으로 기업 간 네트워크 및 사회적 관계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팀은 향후의 연구에서 기술의 특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업 생태계의 구성원(대·중·소기업들)들 간의 바람직한 역할 관계를 정립하고 바람직한 기업 생태계로 발전시키고 진화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팀은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인 기업생태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공헌하고자 한다.

한국형 모델 : 다이나믹 코리아와 냄비근성

유정식(연세대 교수)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붉은 악마와 같이 빨간 색 옷을 입고 전국에서 수백만명이 일사분란하게 응원전을 펼친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열정적이면서도 질서를 지키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그러한 행동이 자발적인 즐거움과 연결되어 거대한 용광로처럼 사람들의 에너지가 국민전체에 융해되어 활활 타오르는 광경은 보기 드문 장관이었다. 한국 사람들이 갖는 이러한 신명에 기초한 대동단결의 모습은 IMF 위기 시 금모으기 운동으로 나타난 바 있고 이 역시 외국 언론들의 비상한 관심을 끈 바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모습은 흔히 “Dynamic Korea”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반드시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다. 연예인의 병역문제 등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일방적인 진실만을 가지고 여론이 쏠리는 인터넷을 통한 무자비한 인신공격, 초중등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왕따 문제,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성형, 다이어트 광풍, 학교 성적과 시험에 대한 광적인 집착, 지역 논쟁이나 이념 논쟁에서와 같이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자비한 낙인찍기, 출세 및 성공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잣대 등 중심 없이 여론이 휩쓸리는 현상도 우리는 흔히 관찰한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시류에 따라 흔들리면서 강력한 에너지가 발현되는 현상은 흔히 속칭“냄비 근성”으로 설명되어 왔다.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신명과 때로 나타나는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속성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모습과 부정적이고 전근대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외견상의 근대가 한국인과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나타낸다면, 내용적인 전근대성은 정체성을 대변한다. 거시적인 사회경제와 미시적인 개인이 모두 이런 이중성이나 모순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동전의 양 측면”을 한국사회를 분석하는 키워드로 설정하고 한국사회의 고유한 속성에 따라 나타나는 한국적 상황을 통칭하여 한국형 모델(Korean Model)로 칭한다. 이러한 한국형 모델이 한국사회와 경제에,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모델의 정형성을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한국형 모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다. 전후 개발도상국 중에서 한국만큼 경제성장과 민주제도의 정착이라는 양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첨단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술전쟁에서 선두의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평화적으로 이룩하였고 민주적인 절차나 전통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인류역사에서 굉장한 의미 있는 사건이며 이러한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 온 소위 한국형 모델은 과연 성공적인가? 성공적이라면 어떠한 면이 그러했는가?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좌절을 느끼고 비정상적인 과열경쟁이나 배타성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현상들은 상호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한국형 모델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면 한국형 모델에 대한 이론 모형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한국형 모델의 특징을 어떤 방식으로 이론화할 것인가? 기존에 나와 있는 한국형 모델과 관련한 논의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해명과제는 무엇인가? 이론모형을 나름대로 정립할 수 있다면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국사회의 핵심과제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어떤 과제에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소위 triggering mechanism)? 기존에 나온 각종 대안, 예컨대 사회적 기업, 미소금융, 각종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점에 보다 관심을 두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 이는 한국사회의 고유한 특징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한국형 모델 : 다이나믹 코리아와 냄비근성: 토론

김재한(한림대 교수)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새마을운동과 민주화운동 등 벤치마킹할 발전 모델로 한국을 거론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국내에서는 현재의 한국 정치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학자 혹은 한국에 거주했던 외국인들의 눈에 한국 민주정치의 어두운 면이 종종 지적되어 왔다. 정치 불신, 정치 양극화, 정책 비일관성 등의 문제는 자주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배경에는 집단화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1960년대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한국정치를 소용돌이정치(Politics of Vortex)로 표현했다. 1980년에는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John Adams Wickam)이 지도자를 따라 몰려다니는 나그네쥐(lemming, 당시 국내언론에는 들쥐로 번역)에 한국인을 비유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나그네쥐효과(lemming effect)는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쓸림 현상을 말한다. 한국의 역동성은 1997년 금모으기운동, 2002년 월드컵 응원, 2009년 촛불집회 등으로 이미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된 바 있다. 이처럼 거국적 집단으로 행동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패거리의 양극화로 서로 나눠 싸울 때도 있다. 민주정치에 대한 불신은 끝이 없고, 정당은 끊임없이 신장개업하거나 뒤통수로 창당과 합당을 반복하고 있으며, 정당체제는 매우 불안정하고 관료와 시민사회도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다.

미국,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다른 외국 정치사회를 벤치마킹하여 한국 정치사회를 변혁시키려는 시도가 많다. 한국이 벤치마킹하려는 국가의 학자들에게 한국 국내에서 그런 노력이 있다고 언급하면 놀라는 경우가 많다. 자신들은 한국을 닮으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자기를 닮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의아하게 여기기도 한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처럼 큰 나무일수록 그늘은 크고 더 명확하게 존재한다. 그런 그늘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유정식 교수의 발제 제목은 ‘발전모형으로서의 한국형 모형’이다. ‘발전모형으로서의 한국형 모형’이라고 하면 타국 특히 개도국들이 발전을 도모할 때 원용할 수 있는 모형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발제 내용에는 발전을 저해하는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만일 ‘발전모형’과 ‘발전유형’을 구분해서 ‘한국형 모형’을 서술한다면 한국형 모형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형 모형이 동아시아 모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서술한다면 한국형 모형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네 마리의 용으로 표현된 동아시아 신흥국들은 유교자본주의 혹은 교육열로 설명되기도 했다.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는 Alice Amsden과 같은 구미 학자에 의해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배경으로 설명되기도 했고,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에는 국내외 여러 학자들에 의해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폄하되기도 했다. 김재한(『합리와 비합리의 한국 정치사회』 소화, 1998)은 아시아적 가치를 집단이익 우선과 불투명성으로 구미적 가치와 구분시키기도 했다.

한국형 모델 : 다이나믹 코리아와 냄비근성: 토론

이영철(전남대 교수)

“발전모형으로서의 한국형 모형: 문제의 제기”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진 한국 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야심적인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며, 그 총론에 해당한다. 저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듯이 보이는 주요한 현상을 하나의 모델로 설명하려 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붉은 악마 현상에서 나타났듯이 열정적이며 질서를 지키고, 에너지가 국민전체에 융화되어 나타나는 역동성을 보인 반면, 인터넷상의 인신공격, 학교에서의 왕따 문제,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 성형, 다이어트 광풍, 성적에 대한 집착,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낙인찍기, 성공에 대한 일률적인 잣대 등 부정적이고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강력한 에너지를 받

산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를 역동성과 냄비근성으로 요약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 두 측면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이 표면화된 것으로서,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 있다.

저자들은 동전의 양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사회의 저변에 깔린 구조적이고 전통적인 문제를 총체적인 모습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한국형 모델의 빛(역동성)과 그림자(냄비근성)를 동전의 양면으로 보는 저자들의 관점이 ‘구조적 동전’을 제대로 비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저자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에 따른 (엘리트의) 외세의존성, 구심점 없는 심리적 의존성, 기관장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와 서열주의, 가부장적인 가족공동체의 폐해를 열거하는 한편, 근대화에 따른 수평적이고 개방적 문화의 확산, 시장경제의 확산과 민주적 절차의 전파에 따라 합리적 문화가 정착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논의한다. 그런데, 서열과 위계를 어려서부터 주입하는 교육제도가 있는 한 한국형 모델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들 속에서 저자들이 말하는 구조적 동전이 무엇일까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외세의존, 심리적 의존, 위계질서가 근대화의 여러 특성과 하나의 구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저자들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비동시적인 것의 혼재’를 말하려는 듯하다. 혼재는 서로 다른 구조적인 것이 동시에 있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그것이 잘 연결된 하나의 구조를 의미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형 모델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저자들이 제시한 답안은 결국 교육으로 귀결된다. 저자들은 한국사회는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도록 보험역할을 할 수 신뢰를 구축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지닌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제도가 폐해를 증폭시키는 기제라고 보면서, 어떻게 그 교육제도가 문제의 해결구조가 될 수 있을까? 소명의식을 지닌 엘리트는 어디서 교육될 것인가? 저자들이 비판하던 엘리트에게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것은 저자들의 소망적 사고가 아닐까? 그리고 그 소망적 사고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지 못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토론자는 경제학자인 저자들이 그레고리 헨더슨의 『소용돌이의 정치(1968)』로부터 구조적인 관점의 통찰력을 얻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헨더슨은 한국사회가 지역적, 언어적, 신분적인 동질성이 높은 사회이었고, 사회적 균열(cleavages)이 미약하여서, 그를 바탕으로 한 중간집단을 갖지 않은 특이한 사회라고 본다. 높은 사회적 동질성과 중간집단의 미발달은 중앙권력의 강화를 가능케 하였고, 모든 재능있는 개인은 교육을 통해 중앙의 권력을 지향하는 원자화된 동원체계가 만들어졌다. 한국정치의 모델을 제시한 헨더슨의 분석은 5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왜냐하면, 신분사회의 미확립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만드는데, 그나마 미약하던 신분사회의 잔재가 최근 60~70년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완전히 와해됨으로써 사회적 지위 향상의 수단으로서 교육은 더욱 중요해져, 저자들의 말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이 전쟁이 되었다. 사회적 동질성이 높고, 신분구조가 고착화된 많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성격은 저자들이 말하는 신분제(身分財)를 추구하는 광적인 행위인 명품소비, 왕따, 낙인찍기, 심리적 불안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이라 볼 수도 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속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사회의 본질을 간단한 모델로 설명하는 것은 모든 한국 사회과학자의 꿈이고, 또 제3세계의 많은 국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만큼 한국형 모델의 분석은 보람있고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높은 작업이다. 이런 면에서 저자들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소중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국 노년의 사회적 이해: 연령주의(Ageism)의 전개와 양상

김주현(서울대 연구교수)

본 발표에서는 첫 번째로 연령주의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연령주의 논의가 사회적으로 등장하고 전개되는 맥락을 미국, 일본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함의를 통해 한국 사회의 연령주의 논의를 진단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3국의 주요한 노년담론과 연령주의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두 번째는 한국 사회의 연령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인 연구로서, 연령주의 실태를 양적 자료로서 측정하고 현재 한국의 고령사회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은 아직 연령주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노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는 많이 늘어났으나 상대적으로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한국에서의 노년 담론과 연령주의의 사회적 전개 양상을 보면, 앞에서 본 미국과 일본과 같은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미국사

회에서처럼 연령주의에 대한 비판이 사회적 권리의 차원에서 전개되지 않았으며, 일본사회처럼 노년기 생활 보장의 문제로 제기된 것도 아니다. 다만 노인관련 정책과 제도가 정부와 관료들을 중심으로 제안되어지고 만들어졌으며 노인들이 주체가 된 노인운동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유사하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한국의 노인 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에는 노인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사회적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과 노인들로 인한 사회문제의 방지와 해결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연령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사회적으로 전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통해 향후 한국의 인구 구조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주의(Ageism)적 관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생산성/능력 우선주의 가치와 결합되어 연령차별이 고착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한국 노인의 사회적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한국사회에서 노인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연령주의(Ageism)의 영향요인을 밝혔다.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실증조사 결과를 통해 개발된 조사도구(척도)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령주의 평가 내용을 조작화한다. 그리고 실증조사를 통해 연령주의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척도를 개발한다. 나아가 이렇게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여 연령주의(Ageism)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최종적으로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21개 문항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개발된 21개 척도를 활용하여 한국의 연령주의(Ageism)이 생성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성, 연령, 가족관계, 학력, 경제활동, 건강, 지역 등의 속성과 연령규범 및 고령자와의 접촉, 행복도 등의 요인이 연령주의(Ageism)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주의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행복감을 더 느낄수록, 고령자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연령주의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상태와 행복도는 연령주의를 가 덜 나타나게 하는데 매우 유의미한 일관성을 보이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차별행동, 외모변화, 분리, 기피/회피에 대한 연령주의에 있어서는 고령자와의 접촉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주의를 통해 노년을 해석하려는 시도들은 노년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 즉 생활세계의 각 측면과 관련하여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퇴직, 수입보장, 의료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고 정부의 예산부족에 따라 노인에 대한 제도들이 연령주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연령주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노인들의 자존감의 상실,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상실 등 개인적 비용, 강제퇴직제도로 인한 수많은 노인들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무시하는 것 등의 경제적 비용, 노인들의 지혜와 사회적 지원, 그리고 문화적 자원을 무시하는 것 등의 사회·문화적 비용 등을 연령주의를 통해 바라봄으로써 현재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김주현, 2009). 앞으로 국내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각 사회의 연령주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향후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집단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이 결과는 노인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노인관련 업무를 실천하는 현장에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만, 이번 연령주의 척도 개발을 통한 문항들은 추가적인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척도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특성(학력, 결혼상태, 경제상태, 건강 등등)에 따른 동질성 검증을 통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계속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국제비교를 위한 척도 개발과 함께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한국적 연령주의 척도 개발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노년의 사회적 이해: 연령주의(Ageism)의 전개와 양상: 토론

안형기(건국대 교수)

고령사회의 기준

- .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 . 고령사회(Aged Society): 14% 이상

- .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 20% 이상
- . 고령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보편적으로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시행령: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고령자(2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라 정의¹⁾

Ageism(나이차별)

- . 1969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cheo 소장인 로버트 버틀러가 최초로 사용(버틀러는 연령에 따른 친환경패러다임의 차이도 규명하고자 한 사람)
- . 뉘앙스가 연령에 따라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을 갖거나 차별하는 사상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연령에 의해 야기되는 불합리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주의를 언급할 때 사용
- . 구체적으로 말해 나이가 들에 따라 사람의 매력, 지적, 성적 능력, 생산성 등이 떨어진다는 믿음을 근거로, 나이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로 정의
- . ‘노인’이란 말이 담고 있는 ‘의미’: 의식적으로 배제, 사회적 불평등이데올로기 => 사회적 관계속에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노인부양비율

- . UN 추정치: 한국의 노인부양 비율은 2009년 14.7%로 미국(19.1%)보다 낮고 중국(11.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이 비율이 62.9%에 이를 것으로 예상.
- . 고령화 -> 총저축 감소, 국내조달 가능 투자 재원 감소 ->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저하
-> 재정 건전성 악화요인.

20대 일자리 줄고 50세 이상 크게 늘어

- . 2012년 말 1천591만3천개로 1년 전보다 40만8천개(2.6%) 늘어
- . 일자리 가운데 31%가량은 1년 사이에 조직 신설·확장으로 새로 생기거나 퇴직과 입사로 근로자가 교체된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현상이 오히려 연령주의를 악화시킬 우려
- . 연령계층별 임금근로 일자리 수: 30대가 점유한 일자리가 470만1천개(29.5%, -1.3%포인트)-> 40대(421만6천개, 26.5%, -0.6%포인트)-> 20대(302만5천개, 19.0%, -0.5%포인트) -> 60세 이상(+ 0.6%포인트)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 노화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신체기능이 떨어진다는?
- .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노령의 노동인구는 ‘무능’과 ‘비효율’의 대명사
- . ‘노화’를 더 이상 자연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골칫거리로 인식 -> Ageism

사회가 Ageism을 부추기고 있다.

- .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가입시켜 주려 하지 않고, 보험료도 비싸다.²⁾

정책적 차별

- . 이명박 정부말기에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65세 고령자 기준 연령을 70~7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함
- .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서 개별법에 65세로 규정된 고령자 기준연령을 100세 시대 패러다임에 맞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짐
- .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practices)국면으로 들어가면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1) 2060년대에 이르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거의 완벽한 노령화 시대 예측됨. 1980년에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3.8% -> 2000년에 7.2%(고령화사회 진입) -> 2020년에 15.6%(고령사회) -> 2030년에 24.3%(초고령사회) -> 2050년(38.2%)로 진행 될 것으로 예측.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인구가 2030년에는 5000만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이후 계속 줄어 2100년에는 3700만명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2)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듯. 예로서 캐나다에서 이민정책에서 부모님초청 이민 신규접수신청 중단하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연령주의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 아들->딸->손자,손녀 로부터 학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 65세이상 노인의 41%가 동의, Y 세대들은 불과 13%만 동의

노년담론이 시급하다는 맥락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라는 점 고려

. 본 논문은 연령주의가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가는 경로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술

노령화 위기론; 전통적 가치의 붕괴; 복지국가와 은퇴제도의 등장-> 노년기 사회적 재구성

노화를 새로운 담론으로 -> 연령통합적사회구성원리 -> 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

. 고령화되어가는 연령분포에 따라 이것이 어떻게 'ism' 으로 진화해 가는지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frame을 이용하여 고찰해보았다는 데에 의미

.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연령을 성, 인종과 마찬가지로 자연적 범주(natural category)화의 하나로 인식하여,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고 지적한 점. -> '문화'적 속성을 제도분석의 틀에 포함시키려 하였다는 측면에서 신•구제도주의적 접근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

향후 연구과제

. “제도적 구속력의 한계”에 대한 고민이 담길 수 있길 기대함.

. 신제도주의 접근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사회집단간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가?

. 합리적 선택에 기반을 둔 신제도주의접근법과의 상호보완노력 필요

. 문제는 제도적 구속력을 담보하려면 행위자들 간의 힘의 관계와 협력의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이종영(중앙대 교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비용은 기존의 화석에너지원에 의한 발전비용보다 시장에서 경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은 에너지다원성을 확보하고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데에 기여하나, 경제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한 발전차액 제도는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2조의5에 근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한 비율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는 소위 발전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 대체되었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제도인 공급의무화제도는 2012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발전설비를 우선 구비하여야 하고, 매년 1% 정도씩 증가하는 의무공급량에 맞추어 매년 발전설비를 늘려야 한다. 또한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해당 연도의 의무공급량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초에 부족분만큼 과징금을 부담하게 된다.

공급의무화제도는 공급의무자의 설치비용 부담분 등을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정책으로서 공급의무화제도의 도입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2020년 10%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달성을 가정하면, 2008년 말 기준으로 2020년에는 4.77%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실시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발전부문에 중복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도록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연계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만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인증서가 거래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공급의무화제도의 문제점은 우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를 발전사업자로 하는 경우에 발전사업자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도 공급의무자에 포함하는 것은 의무부과의 연관성원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발전부문의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한 공급의무자는 발전사업자에서 전기판매사업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하여는 전제적으로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전기판매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특별공급의무량의 대상 에너지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법률은 특별 공급의무량의 대상인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정하거나 시행령에서 위임하고자 하면, 특별 공급의무량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는 기준으로 “균형있는 이용·보급” 외에 분산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아직까지 제도도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분산형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에너지정책에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급의무화제도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 제도: 토론

배병룡(경상대 교수)

이 논문은 최근 도입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제도를 시의 적절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 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제도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비교하고 있어서 이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이 논문은 제도에 대한 전형적인 법적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서 저자의 법학 전공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동안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과학문(사회학, 정치학, 경제학)에서 전개해 온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이 논문에 대해 몇 가지 논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국제 사회 속에서 하나의 제도로 확립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를 우리 정부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모방 기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이나 국제 사회에서 발달된 법이나 제도를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모방해 왔는데 이들 제도의 도입 역시 모방 기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모방 기제는 조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존의 잘 발달된 제도를 조직으로 하여금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조직의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이다. 한편 모방 기제에 의한 제도 도입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사회나 다른 나라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해 주도록 한다. 그러나 그 도입된 제도는 그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상황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제도 도입이나 시행에서 시행착오라는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초기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가 나중에 그것을 공급의무화제도로 대체한 예가 그에 속한다. 이러한 지적은 경제학적 시각에 기초한다.

사회학적 신제도론자들은 제도적 논리들(institutional logics)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그 논리들이란 제도에 관련된 의도, 목적, 신념, 이해관계 등이다. 이 공급의무화제도의 취지(이 제도에 의해 지구온난화방지가 가능하다는 신념,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 정부 및 발전회사나 소비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공동부담)를 좀 더 분명히 서술하고 공급 의무자들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법률이 그 공급의무자를 발전사업자에 한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또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지 않고 이미 신재생에너지만을 공급하고 있는 자(한국수자원공사)에게 공급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는데 본 평자는 그런 비판이 일리가 있지만 전적으로 옳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 제도의 논리는 국가 정책을 담당하고 보조해야 하는 정부, 전기 소비자 뿐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고 생존을 유지하는 조직들과 그 구성원들도 일정의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소비자, 전기공급자 각자가 안아야 하는 부담의 정도는 따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도에 대한 접근은 법적으로 뿐 아니라 그것의 형성, 도입, 시행을 둘러싼 정부를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활동을 사회학적, 경제학적, 또는 정치학적 시각에서 접근할 때 그에 대한 논의가 더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세계사회과학포럼(WSSF) 참가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10월 13일-1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사회과학포럼에 참여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디지털 시대의 공공정책과 거버넌스의 변혁>이라는 주제의 패넬을 주최하여 세계의 사회과학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Panel on “Transformation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in the Digital Age”
at the 2013 World Social Science Forum (“Social transformation and the digital age”)**

This panel, convened by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KOSSREC) with supports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akes a critical look at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one of the important social transformations in the digital age in a comparative setting. To this end, the KOSSREC invites internationally recognized scholars on the subject from four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Korea, and USA. Participants present their country experience with an eye toward finding common themes. They also are expected to discuss and learn from each other about the ways and the results in which digital technologies are being used for public policy development and governance innovation.

Coordinator: Chan-Wook Park,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Presenter: Seok-Jin E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and its Impacts on Governance in Korea”
Jane Fountai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Transformation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in the Digital Age: The Case of USA”
Hiroshi Shiratori (Hosei University)

“Transformation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in the Digital Age: The Case of Japan”
Sun Yu (Beijing Normal University)

“Public Access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융합연구: 이론과 실제」 발간

2014 년도 학회장 변경

- 한국국제정치학회
김영재(청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영중(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한국언론학회
김동규(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한국여성학회
손승영(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과)

2013년도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 일정 소식

- 경제사학회
〈경제사학회 창립 50주년기념 심포지엄〉
일시: 2013년 8월 31일(토)
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 본관 101호
- 국제개발협력학회
〈2013년 정기학술대회〉
주제: Post-2015 개발의제의 쟁점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일시: 2012년 12월 6일(금)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40, 140-1,2동
- 대한지리학회
〈공간의 미래, 미래의 공간, 지리학의 미래〉
일시: 2013년 12월 20일(금)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101동 210호)
- 한국경영학회
〈공유가치창출(CSV) 소사이어터 창립세미나〉
일시: 2013년 11월 20일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한국경제학회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장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
- 한국교육학회
〈2014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주제: 창조사회에서의 행복교육
일시: 2014년 6월 27일(금) ~ 28(토)
장소: 고려대학교
-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주제: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한국국제정치학-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일시: 2013년 12월 13일(금) ~ 14일(토)
장소: 국립외교원 2층 세미나실
- 한국문화인류학회

〈가을학술대회〉

주제: 복지, 호혜성 그리고 공동체
일시: 11월 22일(금) ~ 11월 23일(토)
장소: 덕성여자대학교 약학과 및 차미리사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주제: 돌봄위기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각 국 사회서비스의 쟁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일시: 2013년 11월 1일(금) ~ 11월 2일(토)
장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한국사회학회

〈2013 후기사회학대회〉

주제: 한국사회의 변화와 사회학의 대응
일시: 2013년 12월 20일(금) ~ 21일(토)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한국심리학회

〈2014 심리학엑스포(예정)〉

일시 및 장소: 5월 20일(부산 벡스코), 5월 21일(대구 엑스코), 5월 22일(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5월 23일(대전 컨벤션센터), 5월 24일(서울 SETEC)

□ 한국언론학회

〈2013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일시: 2013년 10월 12일(토)
장소: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 한국여성학회

〈11월 한국여성학회 제29차 추계학술대회〉

주제: "시장 사회" : 감정의 정치경제학과 여성주의 대안으로서의 노동윤리학
일시: 2013년 11월 16일(토) 오전 9시~ 오후 6시
장소: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관

□ 한국정치학회

〈2013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일시: 2013년 12월 6일(금)~7일(토)
장소: 국립외교원
〈한국정치학회 60주년 기념학술회의 및 기념식〉
일시: 2013년 12월 7일(토)
장소: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

□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주제: 박근혜정부의 1년 성과와 과제
일시: 2013년 12월 13일(금) ~ 14일(토)
장소: 영남대학교
〈Public Management Research Association〉
주제: When Policy meets Administration: Eastern and Western Voices.
일시: 2014년 6월 29일(일) ~ 7월 1일(화)

「융합연구: 이론과 실제」 발간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에 의해 2012년 6월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융합연구, 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한 데 이어, 2013년 5월에 국제학술대회(“글로벌/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학, 예술, 자연 및 사회과학간 융합 연구: 필요성과 가능성”)을 개최했다. 이 두 차례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들과 융합 연구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타 논문들을 모아 「융합 연구: 이론과 실제」를 출간하였다.

